

'잼버리 질의' 행안위, 여 불참에 파행...전북지사 출석 '불발'

여 이만희 "윤 정부에 책임 넘기려는 의도" 야 강병원 "행안부 장관 수호 위해 어깃장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파행했다.

여야가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탓이다. 양측 간사는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충북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잼버리 파행과 공평 지하차도 참사, 문지마 흥기 난동 범죄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합의 이후 잼버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양측 간 이견이 발생했다.

여당은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에 책임이 있는 김 지사도 이번엔 함께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회 파행과 관련된 현안 질의는 처음에 합의했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김 지사가 출석 명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여당이 원하는 김 지사에 대한 현안 질의는 추후에 다시 일정을 맞추자고 맞섰다.

양측은 개의 직전까지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채 간사 간 의사진행 발언만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며 "우리 당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북지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전북지사에게 대회 파행의 책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 자리에서는 고성이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는 지난 7월에 하려고 했던 현안질의로,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 출석을 못하겠다고 억지를 써서 이날로 미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행태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회의 역할은 망각하고 잼버리 파행에 비난받는 윤석열 정권과 행안부장관 수호를 위해서 어깃장만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상민 장관을 겨냥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출석 거부는 국회법 12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고, 국회도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홍 행안위위원장도 전체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김 위원장은 "오송 참사를 비롯해 수해로 50여명이 사망했고, 문지마 범죄로 인해서



김교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에게 국민의힘 위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회의를 연기하려는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우는 아이 달래듯 여당을 대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안위를 이끌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변용일기자

민주 "대통령실, 국힘 전대 개입 의혹 불법성 법률 검토"

권칠승 수석대변인 "강승규 당무 개입은 위법"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녹취록 공개에 따른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전당대회 출마 만류 의혹의 불법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전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불법성을 지적하고 강승규 수석의 즉각 경질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소, 고발 가능성에 대해 묻자 박 대변인은

"법률적으로 봐야 해서, 불법성에 대한 부분 지적까지는 검토하고 있는데 고소고발 하는 것까지 얘기 나온 건 없다"며 "법률원에서 불법성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강 수석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해 '지인과의 일반적인 대화'라며 강

변했다. 하지만 통화당사자는 '강 수석의 전화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지 결코 사적인 대화가 아니다'라며 강 수석의 변명을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당 대표 후보 예정자에게 '출마 자제'를 요청한 것이 일반적인 대화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더군다나 강 수석이 '출마 자제'를 요청한 시점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 여론조사 발표'가 있던 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수석의 해명은 통화 녹취 공개로 명백히 드러난 '당무 개입' 논란의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당무 개입' 사태는 정당법 제49조 당대표 경선 자유 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중립의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강승규 수석은 '역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당무 개입' 전화가 본인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인지 밝혀라"라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조문 정중히 사절...경제인·언론인도 사양"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아준 인사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더 이상의 조문은 사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조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앞서 공지된 인사들 외에는 예외 없이 조문을 정중히 사절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 7대 종단 지도자, 여야 당4역 등의 조문만 받겠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가족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지는 만큼 고인의 제자들과 학계 지인들의 조문만 받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인 분들이 오셔도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애도의 뜻만 받고 있다"고 했다.

전날(15일)에는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김행 전 최고위원 등이 각각 오후 3시11분과 4시15분, 4시45분께 빈소를 찾았다.

김 전 최고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가족장으로 치른다고 5부 요인 외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5부 요인을 제외한 조문객들은 빈소 안에서 조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한미일 정상회의의 관련 보고를 받고 업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